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성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구성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 '폐지 vs 강화'... 젠더 이슈, 2030대선 뇌관 급부상

윤석열 '여가부 존치' 논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단일 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젠더(성별) 이슈가 대선 정국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조 의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용을 겪으며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키고자 휘발성이 강한 젠더 이슈를 부각시켜 2030 남성 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윤 후보의 기존 공약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었다.

대선 후보로서 정책이나 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갈라치기'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세대·젠더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 유다.

더욱이 윤 후보는 8일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 관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할 것 선대위의 '명칭만 변경', 사실이나 인구감소 문제 다루는 부서 신설"

심상정 "여성가족부 강화" 맞불 "폐지에 분노... 성평등부로 격상" 정의당 선대위 "젠더갈등 유발"

이재명 여성인권 유튜브 출연 "서로다른 입장·의견 듣는게 정치 어떤 청년 목소리도 회피하면 안돼"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입장에 대한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엇박자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새 이름은 아직 확정 안 됐다"며 "어떤 것이 더 신설되는 조

직에 합당한 이름인지는 논의 중이고,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SNS를 통해 "대변인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릴다"며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심 후보도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불을 놓으며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재결합 결과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온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본래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부 설립취지대로 성차별 해소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고, 여

기에 성폭력 근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추가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9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성별 갈라치기와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서 득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온당한 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보시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7일 여성 인권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녹화를 마치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는 등 젠더 이슈가 주말 내내 회자되며 향후 대선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의 논란을 의식한 듯 SNS에 "정치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

어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며 "설령 선거에 손해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촬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 생각도 서로 나누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게 보내주시는 비판은 모두 소중하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젠더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완전히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남성 커뮤니티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고, 그들과 소통하며 결실도 맺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후보가 언제든 사회 갈등이 있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자리에서라도 직접 듣고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며 "지금 지지자들의 우려에 대해 후보도 잘 알고 있다. 이후 시정자들의 판단을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정책이나 의견으로 제시하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번주 국내 상륙

정부, 치료제 100만4000명분 확보 "투약 대상·기관 세부기준 마련중"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번 주 한 국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처방 대상, 사용 기준 등을 정해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이자와 머크 등과 함께 경 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총 100만4000명 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화이자사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4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을 확보 했고, 이와 함께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을 더해 총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 제를 확보했다.

이გი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투약 대상과 공급 대상 기관 등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번 주에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 하겠다"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이후 최 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위 중증 환자가 아직 위험 수위인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3월 신규 확진자 수 2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기초감염 재생산지수가 증가 하는데 백신 효과는 감소하는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며 "델타보다 전파력이 120~18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구용 치료제는 입원과 중증화율을 30.87%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치료제가 도입되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수를 15~5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구용 치료제의 적극적인 확보와 미접종 고위험군의 접종 설득 등 피해 감소 전략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